

KWDI

해외통신

2019년 5월 2차 (2019.5.17 ~ 5.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으로 지자체의 피해자에 안전한 숙소 제공 의무화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정부는 5월 13일,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갈 곳이 없어 쫓겨나고 폭력적인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지냈던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이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의 핵심은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주거 시설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을 훨씬 강화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 시설이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장단기 숙소를 모두 포함한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정책 시행이 확정된 5월 13일, 런던의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어드밴스를 찾아 피해자들과 면담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과 메이 총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 지원 예산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었다¹⁾.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메이 총리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아 피해자들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영국 내무성은 올해 1월 22일,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동도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Bill)을 공개한 바 있는데, 상기 정책은 동법과 연계되어 있다. 5월 15일 기준, 가정폭력법은 영국 의회 합동 위원회에서 법률 초안 검토 과정에 있다.

참고자료

- GOV.UK (2019.5.13.) "Government unveils new support for survivors of domestic abu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unveils-new-support-for-survivors-of-domestic-abuse> (검색일 : 2019.5.14.)
- GOV.UK (2019.5.13.) "Open consultation: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in safe accommod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support-for-victims-of-domestic-abuse-in-safe-accommodation> (검색일 : 2019.5.14.)
- The Guardian (2019.5.13.) "PM vows to end postcode lottery for domestic abuse victim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may/13/pm-vows-to-end-postcode-lottery-for-survivors-of-abuse> (검색일 : 2019.5.14.)

📌 영국 정부는 정책 발표와 동시에 소요 예산과 예산 사용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12주의 조사를 진행한다. 영국 지역사회 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5월,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담은 '가정폭력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숙소 기반 서비스 지원 방안'(Domestic Abuse Services Future Delivery of Support to Victims and their Children in Accommodation-Based Domestic Abuse Services)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조사 기간 동안 가정 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지자체,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가정 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위한 숙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의 결과는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017년 영국 총선 때 보수당의 메니페스토 내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conservatives.com/manifesto>

- Parliament.uk (2019.3.27.)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omestic Abuse Bill",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joint-select/draft-domestic-abuse-bill/> (검색일 : 2019.5.14.)

독일 GERMANY



시골 지역에 아동 성폭력 전문 상담센터 설치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노력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정부에서 시행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카버만 외, 2016),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를 위한 전문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 인력 부족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거주자만을 위한 상담제공 등 지원기관 이용의 장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1년까지 센터 협력 및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 총 8개의 시골 지역에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시범 프로젝트의 목적은 총 8개 시골 지역의 각기 실정에 맞게 성폭력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도움을 주는 전문 지역 상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설치될 상담 센터는 구체적인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책임이 있는 지역 관계자 및 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 독일 연방 정부는 주정부 중 니더작센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20년에 5개 주정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될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약 330만 유로(한화 약 43억 9,56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 및 행정 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 센터 등과 같이 해당 지역의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DGfPI. "Wir vor Ort gegen sexuelle Gewalt", <https://www.dgfp.de/kinderschutz/wir-vor-ort-gegen-sexuelle-gewalt.html> (검색일 : 2019.5.20.)

- BMFSFJ. "Initiative zum Schutz von Kindern vor sexueller Gewalt im ländlichen Raum",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initiative-zum-schutz-von-kindern-vor-sexueller-gewalt-im-laendlichen-raum/135806> (검색일 : 2019.5.19.)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설치될 상담 센터는 거주지 위치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라며 “상담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 보육 시설, 학교,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센터, 청소년청, 교회 등 어디에서라도 전문 지식에 기반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 장소에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을 함께 배치해 효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사업의 총 책임자는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자문관(UBSKM¹⁾)인 요하네스 빌헬름 뢰리히다²⁾. 뢰리히 아동 성폭력 특별 독립 자문관은 “시골 지역의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 기관은 이미 수년간 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쉽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시골 지역의 더 나은 아동보호를 위해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 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 2) 독일 정부는 지난해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자문관(UBSKM)’을 설치했다. 2023년까지 운영되는 ‘독립 자문관(UBSKM)’은 현재 독일 연방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성인지적 감수성이 반영된 사건 진상 규명과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스페인 SPAIN



2019년 총선에 여성의원 비율 47.4%로 역대 최고치 기록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스페인은 지난 4월 28일 조기총선을 개최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여성의원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47.4%로, 총 350석 중 여성의원이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참고자료

- El Pais (2019.5.22.), "The day that women took over Spanish Congress,"
2019년 5월 22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9/05/22/inenglish/1558517200_573782.html
(검색일 : 2019.5.22.)

일각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각 정당 후보명단에서 이미 여성후보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2007년 양성평등법을 제정했으며, 본 법에서 선거 후보명단 작성 시 어느 특정성별 비율이 60%를 넘거나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회 내 남녀 비율에서의 평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법 제정에 따라 1985년에 제정되었던 일반선거법 일부도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일반선거법 제44조에서는 의회, 시의회 등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후보명단에서 각 성별 비율이 최소 40%씩 차지해야한다고 명시하게 되었다. 또한 작성해야하는 후보명단 인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도 남녀 후보 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본 법이 발효된 이후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양성평등법이 제정되기 전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6% 수준에서 이번 약 8배가량 증가한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스페인 선거결과는 스페인 역대 최고치 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은 47%가 넘는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평균 의회 내 여성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반면 이번 의회를 구성한 모든 정당들의 대표가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여성의 날을 기념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 내 정치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아직 만연하고 정당 대표, 장관 등과 같은 주요 보직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임명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정부 내 장관급 보직을 맡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19년 현재 평균 30.5% 수준이다. 이 부분은 스페인 역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거직후-5월초에 이르는 기간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당선된 여성의원이 총 164명이라고 명시했으나, 가장 최근 시점(5월 22일) 보도이자 실제 의회가 개원하고 보도된 스페인 내 가장 유력한 일간지들 중 하나인 El País에서 166명이라고 명시한 것을 따름.

- Euronews (2019.5.1.), "Which countries in Europe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women in parliament?" 2019년 5월 1일자, Available at <https://www.euronews.com/2019/05/01/which-countries-in-europe-have-the-highest-proportion-of-women> (검색일 : 2019.5.22.)
- European Commission (2019), "Repor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EU,"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aid_development_cooperation_fundamental_rights/annual_report_ge_2019_en_1.pdf (검색일 : 2019.5.22.)
- The Local (2019.4.29.), "Spain just elected its most feminist parliament ever," <https://www.thelocal.es/20190429/spain-just-elected-its-most-feminist-parliament-ever> (검색일 : 2019.5.22.)

영국 UNITED KINGDOM



지난 3년 간 여성 대졸자는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성별 임금 격차는 악화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대학을 갓 졸업한 영국 남녀의 임금 격차가 3년 연속 커지고 있다는 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가 공개됐다. 남성과 비슷한 학력을 갖춘 여성이 취업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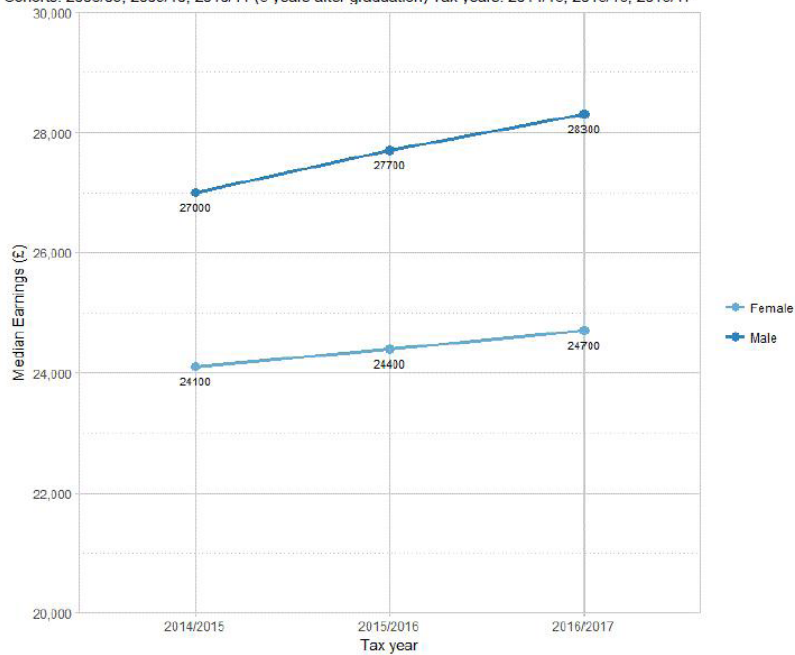
- GOV. UK (2019.3.28.) "Graduate outcomes (LEO): Employment and earnings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by subject studied and graduate characteristics in 2016/17",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90223/Main_text.pdf (검색일 : 2019.5.29.)

- 📌 영국 교육부는 3월 28일 '대학 졸업자 전공 및 특성별 취업과 소득(Graduate outcomes (LEO): Employment and earnings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by subject studied and graduate characteristics in 2016/17)'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소득이 대졸 여성을 매년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 통계위원회(HESA)에 등록된 영국 대졸자 자료를 활용했으며, 2003년~2014년 대졸자 정보와 2003년 대졸자가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소득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 📌 2014~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녀 대졸자 중위 소득(median earnings)¹⁾격차는 2,900파운드(한화 약 435만 원)로 대학 졸업 뒤 5년간 남성이 번 연봉은 27,000 파운드, 여성은 24,100파운드였다. 하지만 이듬해엔 이 격차가 3,300파운드로, 2016~2017년에는 3,600파운드로 점점 커졌다.
- 📌 보고서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대졸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학 졸업 후 첫해엔 남녀 임금 격차가 8%로 남성의 소득이 높았다면, 5년 뒤엔 15%, 10년 뒤엔 31%로 남성이 여성의 소득을 앞서갔다. 이같은 성별 임금 격차에는 임시직(part-time)에 종사하거나 대학 졸업 후 석박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 📌 하지만 대졸자 임금 격차에는 성별 외에 가정환경 등 다른 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고등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지원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연평균 소득이 3,000파운드 적었다. 무상 급식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는 뜻이다. 또한, 학교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소득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소득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 전체근로자중임금을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Median earnings (£) of male and female graduates five years after graduation, 2014/15, 2015/16 and 2016/17 tax years

Coverage: UK domiciled male and female first degree graduates from English HEIs, APs and FECs
Cohorts: 2008/09, 2009/10, 2010/11 (5 years after graduation) Tax years: 2014/15, 2015/16, 2016/17



<그림 1 : 2014~2017년 연도별 영국 남녀 대졸자의 졸업 후 5년 간 중위소득>

출처: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90223/Main_text.pdf (검색일 : 2019.5.29.)